

## 칼럼

## 장기채 주필



## 노인 사회 삶, 이대로 좋은가

고령화는 선진국, 개발도상국 가릴 것 없는 세계적인 추세다. 프랑스는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행하는 데 115년이 걸렸고,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데는 40년이 소요될 예정이다. 독일은 각각 40년과 37년, 미국은 73년과 21년이 걸렸다고 한다.

2006년 이미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일본은 24년과 12년이 경과됐다. 한국은 고령사회 18년, 또 초고령 사회로 가는데 겨우 8년이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만큼 빠르다. 우리 사회의 고령화가 유독 심각한 것은 선진국과 달리 충분한 경제 성장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초고속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노령화 현상은 한마디로 '압축적 고령화'라 할 수 있다. 빠른 속도만큼 문제점들이 응축돼 있는데도 국가적 사회적 대비는 어처구니없을 정도로 허점 투성이었다.

무엇보다 지금 우리 노인들은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기난병으로 인정받고 있다.

실제로 고령자 절반 가량 (48.1%)은 빈곤층이다. 그런데

다 지금 같은 저출산 현상이 지속된다면 2030년에는 OECD 평균을 넘어선 24.3, 2050년에는 OECD 평균 25.8%를 훨씬 뛰어 넘는 38.2%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인류 사회는 인류가 그렇게도 원하던 장수사회를 이루했다. 그러나 장수사회의 도래는 생산인구의 감소와 부양인구의 증가라는 새로운 문제를 불러일으켰다. 다시 말하면 세계적인 급속한 고령인구의 증가는 노동력 감소, 저축률과 투자율의 감소를 야기했다.

예컨대 1950년경의 아시아권 노인인구는 5,760만 명으로 4.1%에 불과했다. 하지만 2050년이면 9억 2,290만 명에 이르러 전체 인구의 7.15%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생산인구가 줄고 고령층이 늘어나다 보니 노인 부양은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다.

노년부양비는 2010년 15.2명이지만 2040년에는 57.2명, 2060년에는 80.2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여기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재정 지출이 늘면서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게 되고 노인 빈곤은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 지역사회, 범정부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따라서 과연 한국의 노인들은 위기에 처해 있는가.

자녀들은 점점 부모를 모시려 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우리의 사회 안전망은 여전히 부실하기만 하다.

이런 상황에서 병들고 버림받은 노인들이 스스로 세상을 떠나고 있는 것이다.

이 시대의 노인들은 격동의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관통하며 온갖 고통과 역경을 극복한 세대다.

부모들에게 효(孝)를 행한 마지막 세대이자 자식들로부터 효를 받지 못하는 최초의 세대이기도 하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그들에게 엄청난 정신적 물질적 부채를 지고 있다. 때문에 노인 복지에 관한 문제는 당연히 정책 순위의 상위를 차지해야 한다.

따라서 노인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고령사회'의 운영 패러다

임도 바뀌어야 한다는 뜻이다. 결국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 기업의 생산성이 줄어들면서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각종 사회 보험 운영이 구멍이 생긴다.

돈을 내는 젊은이는 적고, 돈을 타기는 노인만 많으면 보험이든 연금이든 지속 가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한국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 사회 진행은 젊은이들의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기에 더욱 심화되고 있다.

저출산 대책이 본격화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는 66조 5637억 원을 쏟아 부었다.

출산율을 높여서 고령화를 저지하기란 이미 때가 늦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따라서 균형 잡힌 저출산, 고령화 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우리 사회처럼 압축적 고령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준비는 간단치 않다. 그래서 더 치밀하고 배려 깊은 사적이 필요한 것이다.

독일 자동차 회사 BMW의 사례는 눈여겨 볼 만하다. BMW는 신체 기능이 저하된 고령자들 위해 무릎 충격을 완화 시켜주는 나무 바다재를 깔고, 조명을 더 밝히고, 작업장에 확대경을 설치하는 등 크고 작은 79여 개 조치를 취했다.

비용은 5만 달러, 5000만 원 조금 넘는 돈이 들었다. 변화는 놀라웠다. 무엇보다 결근율이 크게 줄어들고 공장의 연간 생산성은 7%가 높아졌다.

BMW는 역시 인류 기업이라는 사실이 확인된다. 고령화에 대비한 혁신인 셈이다.

## 社說

## 명분 없는 의사총파업 철회해야

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하는 전국 의사총파업이 임박한 가운데 진료 공백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응급실, 중환자실, 투석실, 분만실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상급종합병원 등은 만일 의 사태에 대비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김현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13일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확인한 결과 3만3천31개 의료기관 가운데 7천39곳 즉, 21.3%가 휴진 신고를 했다"고 언론에 밝혔다.

앞서 의협 측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협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유통 방안을 '4대 악(惡)' 의료정책으로 규정하고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14일 집단 휴진을 예고한 상황이다.

전국적으로 상당수의 동네병원이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복지부가 지역 내 진료기관 휴진 비율이 30% 이상일 경우 '진료 개시 명령'을 발동하라고 지자체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자 의료계는 더욱 반발하고 있다.

행정명령을 위반한 의료기관은 업무정지 15일, 의료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최대집 의사협회 회장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단 하나의 의료기관이라도 업무정지 처분을 당한다면 13만 회원들의 의사 면허증을 모두 모아 청와대 앞에서 불태우겠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의사협회장의 협박성 발언이 도를 넘었다.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 의대 설립의 정책 목표는 의료 인력의 절대적 수급 불균형과 지역 간 의료 격차의 해소,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에 있다. 우리나라의 인구 대비 의사 수는 OECD 평균과 비교해 턱없이 적다.

의료 인력이 모자라 생명권이나 건강권을 위해 누구나 기본적으로 받아야 하는 필수 의료 서비스마저 받을 수 없는 상황이면 이를 개선하는 것은 당연하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집단행동을 벌이는 것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기 힘들다. 의료계 집단 휴진이 가시화된 만큼 정부도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힘써야 한다.

##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 응급질병상담	1399
▲ 미아·가출인 신고	182
▲ 여성 긴급전화	1366
▲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 이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응급의료센터	1399
▲ 기상예보	131
▲ 범률구조상담	132
▲ 인광 알코올 상담센터	222-5666
▲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 수도 고장신고	121
▲ 전기고장 신고	123
▲ 가스사고 신고	383-0019

## 호남신문 www.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회장·발행인·편집인 김평호	판집국장 직무대리 서선옥
동부권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장평13길 19 (061) 727-3123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 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 (주)남도 프린테크
본지	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휴가철 캠핑장 '코로나' 안전수칙 준수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전국의 캠핑장 대다수가 예약이 매진되는 등 코로나19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이와 관련 방역당국은 캠핑장 특성상 타 지역에서 오는 경우가 많을 때마다 공용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관리자와 이용자의 철저한 방역 수칙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한다.

이처럼 전국의 캠핑장 예약이 매

진되는 현상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해외여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무더위와 인파가 북적이는 곳을 피해 야외에서 휴가를 즐기려는 피서객들이 상대적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캠핑장 관계자들은 휴가철 호황을 반기면서도 한편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해 커지는 불안감을 감출 수 없다는 것이다.

캠핑장의 경우 주로 실내가 아닌 야외에서 생활하며 텐트별로 3~4m 상당의 일정 거리를 두고는 있지만 대부분 마스크를 벗고 캠핑을 즐기기 때문에 혹시나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대부분의 캠핑장은 개수대와 화장실, 샤워실 등이 공동 시설로 돼 있어 전국 각지에서 온 캠핑

족들간 접촉이 빈발해 질 수 밖에 없다는 점도 걱정이다.

캠핑장 관계자들은 방문하는 손님마다 별열체크는 물론 손소독제 비치, 출입자 명부 작성 등의 과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주변 소독 등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사실상 마스크를 쓰는 것이 가장 좋은 실외 역수칙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개인위생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이재복/고홍경 친서 대서파출소

##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 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이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들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자본권력의 횡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독자생존 체제를 구축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작은 변화를 시작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다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호남신문사